

〈출연(연) 30년, 그 역할과 비전〉

‘연구환경 안정성’ 훼손되고 있다

글_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 변혁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창출, 새로운 기술 개발, 첨단산업육성에 필요한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가 바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논의도 바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본다.

우리 나라에서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는 90년대 이후 빈번한 정부 정책 변화와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어느 때보다 그 위상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러한 출연(연)의 위상 저하와 함께 연구 환경의 안정성 훼손은 우수한 연구 인력의 이직 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소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 능력의 상실은 우수한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의 큰 원인이 되었다.

특성 무시한 개혁이 혼돈 주범

그간 정부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의 무분별한 정년 감축, 후생지원제도 축소, 연금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취해진 퇴직금제도 개편, 연구비 수주경쟁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출연(연)이 장기계획에 따라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국가 연구개발비는 늘어났으나 실제 연구를 수행할 우수한 연구인력은 부족한 이상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연구개발비와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가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주요 원인이 있다.

이제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우수 연구인력의 저수지(reservoir)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수 연구인력이 결합된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체제가 운영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주체는 물론 출연(연)이 산학연 협력의 구심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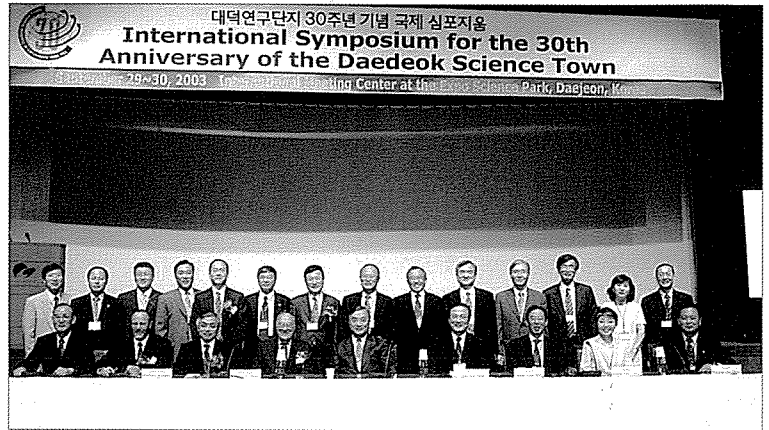
우수인력의 저수지로서 과학기술인력을 사회에 공급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우리 나라 출연(연)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연(연)의 리더십 확보와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다. 즉 출연(연)의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주체로서의 운영체제 확립과 연구원들이 전문가로서 계속 육성되어 국가의 핵심적 인적자원으로서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와 출연(연)의 역할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절한 운영이 요구된다.

리더십, 우수인력 확보 실증

이제는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수립으로 연구개발 정책 방향과 목표에 따라 각 출연(연)이 연구소별로 장기 비전과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으로는 역할분담에 의한 효율적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체와 산학연 협력의 구심체로서 중·장기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우수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이들이 담당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정부 출연 연구소가 국제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연(연)의 운영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연구회 제도의 개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으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출연(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운영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연구회 제도가 출발한 것은 출연(연)의 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연구회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출연(연) 운영의 자율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 운영에 연구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

출연(연) 기관장은 출연(연)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기본 연구 방향 정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장 공모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관 주도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내부 구성원의 의견 반영 장치가 없어 기관장이 각 연구소 구성원의 의견보다는 관이나 외부의 의견에 따라 연구소를 운영하기 쉽다. 따라서 기관장의 선임시 연구의 주체이며 연구소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요 연구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기관장과 연구원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연구기관 운영도 원활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현 기관장 선임 절차 및 선정 위원회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수·행정직 분리, 병원의 의사·간호사·행정직 분리와 같은 인사제도의 도입으로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원이 중심이 되는 출연(연)이 되어야만 연구 자율성 확보와 연구중심의 연구소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직종별 차별이 아니며 구별된 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연(연)의 보다 원활한 운영 및 우수한 연구원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연(연)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주요 운영개선 사항은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 개선, 연구원의 연금제도 마련, 영년제 도입과 연구원 정년의 원상회복,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인력 양성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이다.

이 모든 개선사항은 출연(연)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현행 PBS 제도는 연구원이 연구비 수주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전문적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은 연구원들의 연구비 확보를 위한 외부활동과 그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증가시켜 연구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출연(연)의 기본연구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는 연구소들의 특성화와 중장기적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출연(연) 연구원의 연금제도는 연구원들이 창의적으로 연구업무에 전력을 다하게 할 것이다. 현재는 연구원들의 노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DJ 정부가 시행한 연봉제 실시에 따른 일방적 퇴직금 정산 및 제도의 개편은 연구원의 사기저하 및 불만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에 상응하는 과학기술자를 위한 연금의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원들의 노후 보장과 이를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과학기술인 공제조합은 그 내용이 아직 불투명하며 연구원을 위한 근본적인 노후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연구원 정년 원상회복돼야

DJ 정부는 출연(연)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4년이나 단축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가 오랜 기간 투자하여 양성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국가가 스스로 조기에 포기하는 것이 된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력인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취득 후 20~30년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연구원들의 과학기술 전문능력을 국가가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대학 교수나, 초중고 교사의 정년에 비해 낮은 정년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서 대학으로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과기부에서 마련한 61세 정년 후, 위촉

연구원으로 재계약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영년제(Tenure System)를 도입하여 연구능력 및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원들은 영년직으로 선정하여 65세 정년이 될 때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출연(연)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인력양성 연계돼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인력 양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연구인력 및 첨단고가장비를 활용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한다면, 이를 통하여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의 기업화 또는 기술의 확산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연구원의 대학으로의 무리한 이직현상을 감소시키고 박사급 인력의 대학편중 현상을 해소하며, 출연(연)의 연구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연구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장래 국가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 배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지역균형 발전 등 신정부의 국정과제들도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주리라 예상된다. 내외부적으로는 출연(연)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운영제도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운영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우수 연구인력이 출연(연)에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다.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연) 연구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앞서 제시한 사항들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반드시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과학기술계가 발전하려면 체제에 길들여지는 피동적인 습성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많은 연구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출연(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⑤



글쓴이는 서울대 응용화학과를 졸업, KAIST 석사, 아이오와대에서 화학 및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